

투데이 칼럼

북한 비사회주의와의 투쟁

북한이 고도화된 미사일 시험발사 도발을 이어가더니 이번엔 핵무력을 갖춘 자신들의 군사력에 지구가 충격으로 풀고 있다는 주장까지 하고 나섰다. 그런데, 지구도 충격으로 풀게 한다는 북한이 좀처럼 이겨내지 못하는 게 있다.

바로 '비사회주의와의 투쟁'이다. 외부 문화 유입과 확산을 막아 주민들의 사상, 이념이 자본주의에 물들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이게 어렵다는 것이다.

5년 전, 비사회주의의 심멸을 지시한 김정은 위원장은 최근 만경대혁명화원을 찾아 다시 한 번 비사회주의의 침투를 경고했다. 간부학교에서는 직접 사상교육을 하기에 이르렀다. 비사회주의의 문화가 아무리 단속하고 통제해도 없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김정은 위원장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그 어떤 무기가 아니다. 외부 정보와 문화 유입이다.

최근 창립 75주년을 맞은 혁명가 유자녀 중심의 만경대혁명화원에서 졸업생들과 재학생들이 모여 기념 체육대회를 벌였다. 간부 양성학교인 만큼, 군사교육을 받은 재학생들의 격투와 격려 시범은 수준급이었다.

나이가 어린 학생들은 집단체조와 노래를 준비했다. 처음부터 끝까지 김정은 위원장을 향한 찬양과 충성

심으로 일관된 체육대회였다. 김정은 위원장은 격려와 함께 학생들의 사상 무장을 강조했다.

혁명성은 유전이 안 된다며 철저한 주입식 교육을 주문했다. 특히 '비사회주의'에 대한 강도 높은 투쟁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이 '비사회주의의 침투'를 직접 언급한 건 이례적이다.

북한 당국은 자신의 사회주의 체제에 반하는 생활 방식은 모두 '비사회주의'라며 단속하고 있다. 비사회주의가 일상생활에 침투해 집단주의 원칙을 흐린다는 것이다.

하지만 끊임없는 단속과 통제에도 이른바 비사회주의의 현상은 막을 수 없는 흐름이다. 무엇보다 1990년대 후반부터 중국을 통해 들어가기 시작한 한국 대중문화의 영향이 크다.

북한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스며든 비사회주의의 현상들은 매우 다양하다. 우선, 한국 드라마를 따라 하는



정복규 논설위원

북한 주민들의 말투가 꼽힌다. 북한은 남한식 말투와 언행을 집중 단속하고 있다.

한국식 말투와 영어식 표현의 확산이 주민들에 대한 통제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기 때문이다. 김정은 위원장은 이미 5년 전, 비사회주의의 현상의 심멸을 지시했다.

2020년 12월엔 반동사문문화배격법을 제정해 한류 등 외부 문화를 유포시킨 자를 최대 사형에 처한다고 위협까지 했다. 그런데도 뿌리 뽑지 못하는 것이 바로 비사회주의의 현상이다.

전문가들과 탈북민들은 외부 정보의 유입 경로와 유포자의 변화를 이유로 지목한다. 북중 국경 봉쇄와 단속 강화가 이어지고 있지만, 고위 간부를 포함한 상류층이 오히려 외부 문화 정보를 유포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단속에 빈틈도 커지고 있다. 여기에 일부 상류층의 경우 단속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기보다, 한류 등의 외부 문화 향유를 하나의 특권처럼 여기고 있다.

북한 최고의 엘리트 양성기관인 김일성종합대학교 학생들조차 외부 문화에 익숙해져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일성종합대학 출신 어느 탈북민은 "저희 반에 보통 17명에서 18명 정도 있었는데, 그중에 한 번도 나는 살면서 한국 드라마나 영화를 본 적이 없다고 답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고 회고하며, 김일성 종합대학 들어간 것과는 별개로 외부 정보는 끊임없이 수집했고 또 많이 청취를 했습니"라고 말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만경대혁명화원에 이어 중앙 간부학교를 찾아 강의를 진행했다. 그는 "너수가 두 개면 사람이 정상 활동을 할 수 없는 것처럼 당 중앙의 목표는 전당이 당 중앙과 하나의 머리, 하나의 몸통을 이룬 일심 일체가 되는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한국 등 비갈색상 문화에 대한 북한 젊은 층의 선호가 체제 변화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다. 그러나 김정은 위원장을 포함한 북한 당국이 받아들이는 긴장감은 상당 기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사설

선거사범 수사의 문제

지난 6월 있었던 지방선거의 선거사범 공소시효가 한 달이 채 남지 않았다. 그런데 정작 단체장이나 후보가 수사 대상에서 빠지면서 출속 처리 논란이 일고 있다.

짧은 공소시효 탓에 수사의 신속성만 내세우다 보니 정치인에게 면죄부를 주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장수군수 선거 여론조사 조작 의혹은 응답률이 이상히러만치 높게 나오면서 불거졌다.

보통 10%를 넘기기 힘들는데, 무려 50%대에 달한 것이다. 현 군수와 전 군수 측 모두 조직적으로 여론조사를 조작한 정황이 확인됐다. 지인들 휴대전화 요금 청구지를 장수로 옮겨 여론조사에 참여시켰다.

하지만 경찰은 여론조사 조작이 현 군수나 전 군수와는 상관없는 일로 결론지었다. 전북 자원봉사센터 선거 동원 의혹 수사도 마찬가지다. 전 지사의 3선을 위해 가족과 공무원들이 모집책을 뒤 당원을 끌어 모은

뒤 자원봉사센터에서 만 명 넘는 명단을 불법으로 관리했다.

두 사건 모두 범행에 개입했다고 볼 구체적인 증거가 없었다는 게, 전·현직 단체장을 수사 대상에서 뺀 이유다. 주변 진술에만 의존해 뒷선까지 수사력이 미치지 못한 것이다. 선거사범 공소시효는 선거 다음 날부터 6개월이다. 이 기간 안에 수사와 기소까지 마쳐야 한다.

재판에 넘겨지면, 1심은 6개월 이내, 항소심과 상고심은 3개월 이내 선고해야 한다. 경찰 수사와 송치, 검찰 사건 검토와 기소에 이르기까지 선거 범죄의 실체를 밝히기에 6개월은 촉박하다.

허위사실 공표 등으로 고소·고발돼 본인 출석이 불가피한 수사를 빼면, 단체장이나 후보를 소환하는 것조차 엄두를 못내는 게 현실이다. 결국, 꼬리 자르기가 수사에 단체장이나 후보는 법망을 피해 가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

전주 완주 통합 문제

완주-전주의 통합 문제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상당수 완주군민은 여전히 통합이라는 단어 자체에 강한 거부감을 갖고 있다.

두 지역의 이해와 공감을 확대하는 일부터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북은 광역시가 없어 정부의 주요 정책에서 소외돼온 만큼 전주 완주 통합을 통해 성장의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완주에서는 전주시가 밀어붙이기 식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여론몰이를 중단하라는 비판이 터져 나왔다.

완주 군민들은 통합은 완주군의 미래와 군민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현안인 만큼, 다양하게 논의하는 구조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서로 도울 수 있는 일부터 아이디어를 모아, 내실을 기하는 게 먼저라는 것이다. 다양한 분야의 상생사업이 성공한다면 그 자체만으로 두 지역 주민들에게 도움이 된다.

이해와 공감의 폭이 넓어질수록, 환경이 조성되기 때문이다. 형식적 틀과 행정의 일정을 앞세우면 반감만 더 높아질 수 있다. 협력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앞에 놓고 그 일을 수행하다 보면 통합의 비전도 만들어갈 수 있다.

통합의 비전과 지향점을 더 분명히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단순한 행정 통합이 아닌 투자 유치와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 전북의 핵심축이 된다는 비전을 제시해야 완주 군민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

전라북도는 전주-완주 통합을 통해서 새로운 광역 거대 권역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1997년과 2009년 그리고 2013년 등 세 차례의 실패가 남긴 교훈은 한결같다.

전주시 그리고 정치인이 주도해 일반적으로 밀어붙이는 방식으로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이다. 네 번째 시도에서는 세 번의 실패가 남긴 교훈이 약이 될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

완주-전주의 통합 문제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상당수 완주군민은 여전히 통합이라는 단어 자체에 강한 거부감을 갖고 있다.

두 지역의 이해와 공감을 확대하는 일부터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북은 광역시가 없어 정부의 주요 정책에서 소외돼온 만큼 전주 완주 통합을 통해 성장의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완주에서는 전주시가 밀어붙이기 식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여론몰이를 중단하라는 비판이 터져 나왔다.

완주 군민들은 통합은 완주군의 미래와 군민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현안인 만큼, 다양하게 논의하는 구조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서로 도울 수 있는 일부터 아이디어를 모아, 내실을 기하는 게 먼저라는 것이다. 다양한 분야의 상생사업이 성공한다면 그 자체만으로 두 지역 주민들에게 도움이 된다.

이해와 공감의 폭이 넓어질수록, 환경이 조성되기 때문이다. 형식적 틀과 행정의 일정을 앞세우면 반감만 더 높아질 수 있다. 협력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앞에 놓고 그 일을 수행하다 보면 통합의 비전도 만들어갈 수 있다.

통합의 비전과 지향점을 더 분명히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단순한 행정 통합이 아닌 투자 유치와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 전북의 핵심축이 된다는 비전을 제시해야 완주 군민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

전주시 그리고 정치인이 주도해 일반적으로 밀어붙이는 방식으로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이다. 네 번째 시도에서는 세 번의 실패가 남긴 교훈이 약이 될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COP27 주면서 '인권' 시위하는 시위대



지난 10일(현지시간)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회의(COP27) 정상회의가 열리고 있는 이집트 샤름 엘 셰이크에서 시위대가 '인권'이라는 기후 정의(正義)도 없다'고 쓰인 현수막을 들고 침묵시위하고 있다.

경찰 향해 화염병 투척하는 아테네 시위자들



지난 9일(현지시간) 그리스 수도 아테네 외곽에서 시위자들이 경찰을 향해 화염병을 던지고 있다. 이날 아테네에서는 수천명의 시위자들이 고물가에 대한 대책 마련과 임금인상을 촉구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어려움을 속 시원하게 풀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